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선정

대전 都開公 대통령상

행정자치부는 17일 대전도시개발공사 조준호(趙俊鎬) 사장 등 지난해 탁월한 경영실적을 올린 지방공기업 사장 7명을 2000지방공기업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전도개공 조 사장은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124억원의 예산 절감, 300억원의 부채 상환, 18억원의 순익을 기록하는 등 공사가 2년 연속 흑자를 내도록 이끌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강력한 경영혁신과 주민 위주의 서비스체제 구축 등으로 의료원을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게 한 청주의료원 조의현 원장이 수상했다. 또 공격적인 경영으로 산업단지 등 개발용지 분양에 성공한 경남개발공사 김맹곤 사장은 행자부장관상을, 지역 주민에 대한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서귀포의료원 고우경 원장이 한국경제신문 사장상을 각각 받았다.

〔대한매일, 2001. 1. 18(목)〕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임대조건이 지금보다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유재산관리 개정조례표준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대학과 공공청사, 공장, 연수원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공유지 임대료가 재산평가액(공시지가 기준)의 5%에서 1%로 낮아진다.

〔매일경제, 2001. 3. 31(토)〕

예산 부당집행 地自體長 문책

선심성 사업등으로 재정손실때 변상시키기로

다음달부터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사용 및 예산 남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감사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사원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세칙을 마련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회계직원책임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의 상급자가 회계직원에게 회계사무와 관련,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상급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회계직원이 과실을 범해 재정손실을 입혔을 때 정상을 참작해 변상액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것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정 회계직원책임법의 감사원 시행규칙이 4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감사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예산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도 회계직원만 변상책임을 지는 등 제도의 운영에 미비점이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지자체장의 선심성 또는 업적과시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회계과실로 재정손실이 발생하면 관계직원만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 위법한 회계관계 행위를 지시한 지자체장도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회계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는데도 지자체장이 다시 지시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단독책임을 묻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부당 회계와 관련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지자체장이 회계직원에게 변상을 명령했을 때 회계직원이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매일, 2001. 3. 30(금)〕

재방재정 포함 통합수지 작성

내년 예산부터 정부회계와 공공기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작성, 공표된다.

또 국회와 대법원 등 독립기관들도 일반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예비금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결산서의 국회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150일전으로 앞당기고 정부 회계방식을 현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문화일보, 2001. 3. 2(금)〕

공무원 北출장비 '베이징 수준' 지급

여비규정 현실화…사무관 하루 175弗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최근 대북사업 등 공무원들의 북한출장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지역 출장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지역 출장비는 중국 베이징과 동일한 수준으로 1일 숙박비 86달러, 식비 59달러, 교통비 30달러 등 모두 175달러(사무관 기준)가 지급된다.

또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비를 현지물가수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출장여비를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샌프란시스코・인도・브라질 등 14개 지역의 출장비는 12～38% 상향조정됐고, 마드리드・이라크・알제리 등 12개 지역은 11～28% 하향조정됐다. 〔대한매일, 2001. 3. 14(수)〕

국고보조금 운용 지자체에 재량권

유사사업 통폐합·우선순위 맞춰 쓸 수 있게
기획예산처 법개정키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 지자체가 원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제도에 맞춰 수요자인 지자체의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이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산처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이 더욱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자체가 바꿔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예컨대 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들은 콜레라 예방접종에 사용하도록 받은 국고보조금은 이 용도를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규정 때문에 사업별로 소액을 지원하다 보니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문제도 많고 예산낭비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예산처는 비슷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통폐합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가 하는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고보조금의 종류는 480개나 된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0조430억원이다. 232개 시·군·구별로 평균 433억원이 배정되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의 종류가 480개나 되므로 한 개 사업당 평균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대로 사업이 이뤄질 수도 없다. 형식적인 사업이나 구색 맞추기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처는 또 현재는 일선 시·군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과별로 경쟁적으로 요청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도 개선키로 했다.

〔대한매일, 3001. 3. 12(월)〕

시·군 체육시설 함께 쓴다

경기도, 중복투자 막게. 독자 추진땐 지원중단

경기도내 시·군들이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공동 건립키로 한 데 이어 운동장, 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도 광역화해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27일 이와 관련, 올해부터 체육시설을 단독으로 짓거나 사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광역화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이같은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운동장을 새로 짓고 있는 안산·남양주·의정부 등 3개 시는 각각 인근 시흥·구리·양주 등 3개 시·군과 광역화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안양시와 오산시는 현재 운영중인 운동장을 각각 군포시 및 화성시와 함께 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의정부시·오산시·하남시 등은 각각 양주군·화성시·광주시 등과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인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군이 공공 체육시설 광역화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데다, 광역화 여부에 따른 도의 예산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예산은 많이 드는 반면 활용도는 떨어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자꾸 건립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다"고 공공시설 광역화정책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문화일보, 2001. 3. 27(화)]

민원서류 11종 수수료 인상

경기도 원가의 80% 수준으로

경기도는 현실화율이 평균 20% 선에 머물고 있는 11개 항목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수수료 현실화 대상인 86개 항목의 행정서비스 가운데 11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인상조정안을 마련해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실화율이

란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용지와 인건비 등을 합한 실제 비용에 대한 수수료 수준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34.2%인 돼지·양 도축검사필증(500원)과 13.7%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350원), 4.9%인 소방시설완비증명(550원) 등이 수수료 인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유재산 대부신청(550원), 하자보증금 납부증명(350원), 화재증명(550원) 등에 대해서도 최고 82.3%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행정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는 민원서류 발급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지방세 등 다른 세입으로 충당하는 불합리를 바로 잡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행정수수료를 현실화하면 민원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대한매일, 2001. 3. 20(화)〕

돋보이는 수원시 예산절감 행정

'새주소사업' 외부용역 안주고 공공인력 활용
비용 5억 줄이고 실업자에 일자리 '일거양득'

경기도 수원시가 다른 자치단체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강원도 강릉·동해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 30여곳에 달한다. 기존의 지번 중심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인 도로명 중심으로 바꾸는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해서다.

98년 12월부터 '새주소사업'을 시작한 수원시는 자체인력으로 사업팀을 구성하고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했다. 전문성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한 것이다.

새주소 체계 구축은 수원시내 도로 2,136개 노선과 건물 5만4,851개소에 대한 번호와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건물 번호판을 해당 건물에 일일이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었다. 용역회사는 1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시는 전산입력 작업에 1,500여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3억4,40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건물 번호판은 개당 1만원하는 완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3,000원씩하는 반제품을 구입했다. 공공근로자들이 도로명과 번호를 일일이 새겨넣고 건물에 부착까지 했다. 추가로 1억6,600만원을 절약했다.

수원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도 절감하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5월부터는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손쉽게 목적지와 주소를 찾게 되고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IMF 한파 등으로 실직자들이 속출하는 등 힘든 상황이었다"며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데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2001. 2. 23(금)〕

주차・통행료 잇단 유료화

구리시・포천군 재정 확충

조세저항・경기침체와 공영시설 운영적자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들이 무료로 제공했던 각종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무료 주차장과 도로의 주차료・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하는 등 재원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구리시는 다음 달부터 인창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6,000평) 주차료를 징수하고 여분의 주차공간 8,000평을 민간에 임대하기로 했다. 시는 주차료로 연간 8억원, 주차장 임대로 연간 3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구리시는 또 다음달 19일부터 교문동 구리시체육관 주차장(64면)을 유료화해 연간 7,600여만원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포천군도 오는 12월부터 무료로 제공했던 지방세 감면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발급을 유료화하고 군청 주차장 주차료를 징수해 4,400여만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포천천 둔치주차장(432면)과 포천읍 천주교 앞 0.9km 구간 도심 주차장 유료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의정부시도 오는 10월말 완공예정인 3번국도(의정부～연천) 우회도로 가운데 호원

동 평화로～의정부시청IC(4.29km)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매일, 2001. 2. 16(금)〕

버려진 땅 되살려 郡부채 청산

강원 양구군 3만여평 택지개발 55억 수입, 알뜰살림으로 경비 13억 줄여

인구 2만3,000여명으로 울릉군 다음 전국 최소의 자체단체인 강원도 양구군(군수 任璟淳)은 지난 99년까지 65억여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지난해 58억원을 갚고 7억원의 부채만을 안고 있다. 이는 양구군이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버려진 땅 택지개발 분양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가능했다.

95년까지 기채 73억원을 발행, 상리 일대 군유지와 한전부지 등 구릉지, 논, 하천부지의 버려진 땅 3만2,000여평을 주택용지로 개발했고 지난해까지 분양대금 128억 5,000만원(239필지)을 벌어들였다.

택지개발로만 지난해까지 55억5,000여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나머지 22필지 8억원 상당의 택지도 연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이익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건축폐기물장 직영(5억원 수입)과 수공예 조롱박개발(8,00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과 안보관광지 북한관 직영(3억6,000만원)으로 부수입을 챙겼다.

군청과 읍면동사무소의 난방비를 심야전기로 모두 바꾸는 등 경상경비 절약으로 13억원을 절감한 것도 큰 보탬이 됐다. 흔한 전시성 사업, 선심행정은 꿈도 꾸지 못했다.

양구군은 경영수익사업 성공과 절약으로 지난해까지 기채의 대부분을 갚고 19억원을 들여 군유지를 확보했다. 2001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남아도는 재정을 미래를 위해 짜임새 있게 투자하고 대비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임경순 군수는 "최전방 전국 최소의 자치단체지만 잘살아 보겠다는 군민들의 의지는 남다르다"며 "빚없는 군정살림, 윤택한 군정에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 3. 7(수)〕

의원 외유 타당성 시민대표가 심사

청주시의회 규정안 통과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郭達榮)가 의원들의 해외여행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칙안을 제정, 관심을 끈다.

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김현문(金顯文・42)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달부터 시행될 이 규칙안은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범위를 외국정부차원의 공식행사,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의장의 명에 의한 국외여행 등으로 제한했다.

특히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으로 짜인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 의장의 허가가 떨어져도 심사위가 거부하면 못 가도록 했다.

시의회는 또 의원 1인당 연간 130만원 한도내에서 국외여행을 가도록 제한했다. 그 대신 임기중 한차례씩 실시되던 해외연수는 폐지했다. 국외여행도 상임위별로 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3~4명씩 환경이나 복지 등 테마를 정해 다녀오도록 했다. 심사위는 출국 15일 전까지 의원들로부터 여행계획서를 받아 여행의 타당성, 기간, 대상국가,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의원들은 귀국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한매일, 2001. 3. 2(금)〕

"표고유통公社로 재배농가 살려"

전남 장흥군 김재종 군수

"농촌살리기를 위한 노력이 5년째 흑자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자치단체의 출자사업중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전남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난 92년 장흥군이 지분 60%(6억원)를 투자해 이 공기업을 설립할 당시만 해도 머지 않아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를 뒤엎고 96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같은 성과 뒤에는 김재종(66) 장흥군수의 오롯한 농촌사랑이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김군수는 지난 96년 민선 단체장으로 취임한 직후, 적자에 허덕이던 표고유통공사의 회생을 군정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장흥 표고버섯이 전국 생산량의 12%(연간 450t)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표고버섯을 외면한 '지역경제 살리기'는 헛구호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중간상인들의 가격담합으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먼저 농협의 표고버섯 입찰 때 적정가에 응찰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농간을 차단했다. 이는 이익추구보다는 생산농가 보호에 힘쓴다는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후 다량 사들인 표고버섯의 판로가 문제점으로 등장했으나 품질 고급화로 이를 극복해 나갔다. 또 표고버섯을 원료로 한 음료와 된장, 고추장, 간장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소비방안을 강구했다. 99년 6월 개발된 표고음료는 지난해까지 군납 27만캔, 수출 20만캔을 포함해 130만캔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99년말부터는 종균 구입에 애로를 겪는 생산농가를 위해 155평 규모의 종균 배양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96년 흑자운영으로 전환한 뒤 매년 2~10%의 배당을 민간인 주주에게 주고 있다.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 매출 11억원에 5000여만원의 순이익을 내 올해는 대주주인 장흥군도 10%의 배당을 받았다.

김재종 군수는 "표고유통공사가 산술적으로는 큰 폭의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생산농가 보호와 5000여명의 고용창출 등을 합치면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1. 3. 21(수)〕